

## | 긴급대담 |

# 사회적 대화, 왜 중단됐나? 대화 복원을 위한 노사정의 책무

- 일시 : 2018년 6월 4일 오후 6시
-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좌장)
  - 강진구 경향신문 탐사보도팀장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 한석호 전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정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동안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가던 과정에서 일어난 이번 일로 인해, 한 걸음씩 복원의 수순을 밟아가던 사회적 대화가 일시에 중단됐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격월간 <사회적 대화>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고, 향후 사회적 대화를 안정적이고 공고하게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긴급대담을 마련했다. 긴급대담은 지난 6월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좌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산업노동학회 학술이사  
광주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



**강진구** 경향신문 탐사보도팀장

현 공인노무사, 노동탐사전문기자  
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현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University of Oxford, Social Policy, 박사  
전 교토대학교 조교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한석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연대위원장

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  
매일노동뉴스 칼럼 연재  
전 전노협 조직쟁의선봉대  
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 사회적 대화, 왜 중단됐나?

**박명준** 이번 호 대담 주제는 최근 너무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긴급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대화의 파행과 교훈'입니다. 당초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주제를 긴급하게 조정했습니다.

일단 사회적 대화는 왜 중단됐는가라는 주제로 넓게 질문을 잡았어요. 왜 중단됐는지는 최저임금 관련 프로세스를 볼 수도 있지만 폭 넓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든 노사든 조직 주체들의 행태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중단이 예견된 사태였는지, 이것을 미연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질문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단된 사태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이 사태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롭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짚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어떻게 좀 더 공고한 체계로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의미 있는 시도를 114일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컸던 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법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반, 심리적인 인프라, 문화적인 차원 등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 있는 다짐을 해오던 찰나였는데 사회적 대화가 파행되어 허탈하기도 합니다.

우선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강진구** 이번 대화 파행의 직접적인 문제가 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개정이 결과적으로는 경제 현실을 이유로 노동조건 개선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재계 쪽의 논리에 두 손을 든 형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노정 심리적 동맹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최저임금 문제도 문제이지만, 최저임금 합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앞으로 노동의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보다 결국 재계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강한 불신감을 심어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박명준** 정부와 여당이 노동과 손잡고 가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징표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틀었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강진구** 구체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정하게 주고받기를 해야 하는데, 이번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게 전혀 없어요. 재계의 요구는 다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왜 이런 개정을 했는지 참 안타깝죠. 차라리 통

상임금, 임금체계 문제와 같이 연동해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면 주고받기식 협상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임금체계 논의가 사실 선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걸 빼버린 채 재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일방적으로 집어넣고, 뒤늦게 통상임금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어음을 남발하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걸 봤을 때 과연 노동계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의 과정 관리 실패

**노광표** 지금 노사정 대화가 파국 상황으로 온 것과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은 별개라고 봅니다. 현상적으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노사정 대화의 질곡으로 작용한 요인인 것은 분명한데,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사회적 대화의 예정된 파국이 좀 앞당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노사정 대화가 잘 될 것이라고 했던 낙관론 자체가 과잉 해석됐던 것이죠. 이게 한국의 노사관계나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IMF 이후 지난 20년 동안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보다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전개됐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부 여당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과정 관리에 대단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양대 노총의 의견들을 거의 들어줬고 재계의 반발을 막아왔지만, 새로운 집만 지으려고 했지, 왜 집을 지으려고 했고,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터진 거라고 봅니다.

현상적으로는 최저임금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파국을 촉발했던 원인이지만,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관계나 노사정의 각 주체에 대한 준비 정도가 최저임금 문제를 통해서 폭발했던 것이고, 이게 봉합되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면 과정 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볼

수 있고, 노동 쪽에서 느끼는 변곡점들을 관리 안 하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번 기회에 던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노동계도 설득하지 못하고, 재계의 반발을 억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준** 사실은 예견된 파국이 앞당겨진 것이고 정부가 과정 관리를 소홀히 했다, 새로운 집만 지으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도 정부의 실패로, 사회적 대화의 중단은 정부가 관리를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노광표** 법을 바꾸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견되는 사태들에 대한 관리는 뭐를 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는 거죠. 법 하나 만드는 데에도 사소한



것까지 신중하게 해 왔는데,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위원회 의 손을 떠나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욕먹어도 해결하겠다는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 있게 나서서 정리하는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주체가 그렇게 모여면서도 예정된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홀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미흡한 사회안전망, 최저임금 사태 키워

**박명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다양한 지점들마다 더 공들여서 사회적 대화로 답았어야 했다는 의견으로 보면 되겠죠?

**이승윤** 저도 일차적으로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노사정의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세 주체가 뭔가 내놓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무엇을 내놓았는지 명확하지 않죠. 처음에 최저임금 인상이 됐을 때도 일자리 안정 지원금 규모가 3조 원 정도 된다고 했지만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노사가 갈등할 땐 대화가 되게 하려면 대화가 될 수 있게 끌어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부가 뭔가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는 것이 있어야 둘이 합의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상 최저임금 문제는 뜨거운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자영업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매우 심하잖아요. 그런데 영세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생산비용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기업보다 임금이 주는 부담이 훨씬 큰 거예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비중도 영미권 국가들과 함께 상위에 있죠. 핀란드에 비해서 3배 정도 높거든요. 저임금 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의 50% 이상이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은 노조 조

직률이 다른 데보다 떨어지죠.

여기에다 사회안전망 자체가 매우 부실해요. 실업급여는 세계 최하위권이고, 실업이 됐을 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직업훈련 받는 것도 최하위권이에요. 사회부조도 하위권에 속해요. 실업안전망이 매우 허술하니까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고용주나 영세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구도이니 너무 안 좋은 구도인 거죠.

노조 측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노조가 최저임금보다 더 넓게 아젠다를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하나 이기면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근저에 훨씬 많은 일들이 있는데, 협상 테이블에 대신 이걸 해 달라는 다양한 협상 패키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다음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망이 갖춰져 있어야 하죠.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믿을게 없으니까 최저임금이라도 꼭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는 대화를 더 잘하거나 설득을 더 잘하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큰 약속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큰 판을 생각하고 노조도 협상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치고 나갔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영세자영업자가 많고  
격차가 심한데다가  
사회안전망마저 부실해  
최저임금 논쟁 커졌다

**박명준** 강진구 기자님은 최저임금법의 후속 조치를 관리했던 방식에서 정부의 문제가 있었

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안 되었다고 보신 것이고, 노광표 소장님은 반드시 최저임금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지퇴들이 현안으로 있었는데 이걸 등한시했고 그것이 최저임금에 와서 터진 것이므로 최저임금만이 촉발 요인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고, 이승운 교수님은 일단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데, 애초에 의제 세팅이나 교환 구도 자체가 너무나 협소한 방식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차로 정부에 문제가 있고, 노조도 패키지로 뭘 교환할 것인지가 아니라 협소한 구도로 가서 교환의 폭이 너무나 좁다 보니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없었던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노사정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석호** 저는 노사정이 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노사정이 어떤 식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일단 노동부터 이야기를 하면, 노동의 전략부재였다고 생각해요. 국회로 공이 넘어가기 전에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더 시간을 갖고 풀었어야 했죠. 그걸 풀기 위해서 노동계 내부에서 간부들 토론이든 조합원 토론이든 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책임 있게 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사회적 대화 내지는 노사정 관계, 정부와의 관계, 사측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노동의 오랜 관성이고 한편으론 자신감 부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노동은 노사관계, 노정관계, 노사정관계에 있어서 주체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어는 정부이거나 자본이었고 노동은 술어였고 객체였어요. 그래서 노동은 정부와 자본, 재계를 향해서 뭘 해 달라, 이걸 안 된다는 식으로만 갔던 겁니다. 그것이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계 입장에서는 개정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노동에 발등의 도끼가 됐지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재계에도 발등의 도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계는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달리 가동할 수 있는 지



식이나 언론이 많아서 계속 작업을 해오면서 그걸 자기 전략으로 가져오긴 한 건데, 이번에는 유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재계 또한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모면하거나 피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서 거기에 책임을 돌릴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사측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앗 뜨거워’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한편, 문재인 정부 노동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사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부서와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일관되게 국정철학을 가져가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긴장감이 떨어진 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긴장감이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한편으로 방치하고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워낙 크니까 거기에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았겠나 하는 생



각은 들지만 긴장감이 떨어졌던 거죠. 여기에는 노동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이렇게 해도 결국 사회적 대화로 갈 것이라고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준** 한 선생님 의견은 노사정 모두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일차적으로 노동계 전략 부재와 자신감 부재, 이차로 재계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상황 회피적인 방식으로만 임했던 점, 무엇보다도 정부가 컨트롤타워의 미흡함 속에서 긴장감도 떨어지고 문제를 방치하면서 안일하게 밀어붙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손쉬운 판단을 했는데 그게 오판이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노광표 소장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사회적 대화가 잘될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판을 디자인했는데 기구의 축조에만 몰입했지 실제로 현 국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대화를 세팅하는 데에는 미흡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그 지점이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회적 대화라는 판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나? 그럼 새롭게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까 하는 거죠. 현안을 다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다른 한 편으로 현안을 다루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최저임금 등 굵직굵직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현안들은 애초에 작년에 설계될 때부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죠. 이 정책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사회적 대화 체제가 너무 미흡하고 기구 자체도 완전 식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접목시키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뭔가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볼 여지는 없을까요?

## 사회적 대화 복원, 무엇을 얻을지 분명해야

**노광표** 외환위기 이후에 이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구가 작동을 하는 건데, 왜 작동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사정 주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합의해 나가면 입법하는 데에 좋겠다고 하는 정도의 선만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사회적 대화가 추진된다고 하면 관성적이고 제도적인 효과를 뛰어넘는 합의 속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사회적 대화가 강조되는가 하면 그건 대통령 공약 사항에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사회적 대화를 누가 할까요? 재계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재계가 특별히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 제도를 통해서 양보했을 때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정부는 국정과제에 있으니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럼 노동계는 이것 원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내부의 합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대화가 왜 필요할까요? 저는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때가 됐

다고 말합니다.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뛰어넘는 정치적 세력화가 되거나 자기의 물적 기반이 있다면 굳이 사회적 대화에 목 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이번 최저임금 사태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대화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 것 말고는 보여줄 수 있는 자기 전략이 뚜렷하지 않고 새로운 의제를 못 던지고 있다는 거죠.

기업별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한국의 현 단계에서는 사회적 대화 외에는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중앙집권적인 의제를 던질 수 있는 공간과 교환할 수 있는 단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업별 노사관계, 임금의 양극화, 노동시장 문제 등의 의제를 노동이 사회화하고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단위는 이 사회적 대화 체계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지렛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국회라는 구조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단히 민감하게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최저임금이란 것 자체가 시장에서 상인들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졌다는 것이고 저런 법안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되지 않은 노동문제를 국회에 내던져 났을 때 의도하지 않게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틀을 깰 수 있는 하나의 파열구를 노사정 대화 구조 속에서 만들어 내는 건 단순히 노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의 노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잘 딛고 보듬어 안아서 새로운 체계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노동이 이걸 팽개쳤을 때 가장 좋아할 것은 재계이고, 정부 일각에서도 이 귀찮은 구조를 탈피했다고 좋아할 게 뻔합니다. 노동이 더 큰 전략을 짜고 그 속에서 한국의 정치구조 내부의 기업별 노조 체계, 낮은 조직률에 대한 자기 실력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5년 동안 무엇으로 승부를 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여러 가지 할 것 없어요. 모든 걸 노동이 다 할 수 있는, 노동자 정부가 들어선 것 같은 요구를 해서는 국회와의 관계도 결속력이 없을 것 같아요.

**박명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여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잘 가꾸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에 보여줬는데, 여기에 임하는 노동계의 태도가 마치 무슨 노동자 정부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하려는 국면으로 달려들다 보니 무엇도 못 이루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파행중인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석호** 먼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뭘 할 것인지 노사정 모두가 다 일치할 순 없지만 큰 방향에서 노사정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는 ‘양극화 해소 혹은 완화’ 프레임 안에서 노동존중사회가 한 축이 되고, 상인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도 그림이 잘 그려지면 좋겠어요. 실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이나 영세 소상공인들도 들어오잖아요. 노사정이 이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를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직 일치 안 되어 있고, 서로 불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전히 전략적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정부가 인내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노동계나 재계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략적 인내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 의제를 사회화하고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공간은  
사회적 대화 외에 없으므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수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문제와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어서 후퇴하지 않고 공약대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 사회적 대화 통한 그랜드 디자인 필요

**박명준** 필요성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전략적 인내를 하고 현재 이 사태에 대한 수습책으로서 여러 가지 방안,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조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승윤 교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국회로 이관하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최저임금 가지고 정부가 많은 걸 풀려고 한 베이스가 없는 상태였다면 노동계나 재계가 합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승윤**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판이 워낙에 좁았고, 최저임금에 산입하더라도 정부에서 뭘 내놓는 대신에 뭘 얻을 수 있는지가 없었다는 거죠. 노사정이 다 합리적인 객체라고 봤을 때 노사정 합의라는 건 각자 자기에게 좋은 뭔가는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으면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선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간 3자가 뭘가 이뤄왔던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믿음이 처음부터 시작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자가 뭘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분명하게 세팅이 되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판이 넓어져야 하죠. 노사정 합의를 해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할 때 합리적인 주체로 들어와서 다양한 협상안을 가지고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매우 협소하게 시작됐기 때문에 파행되는 게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구**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의 문제를 복지와 연결시켜 폭 넓은 의제로 해서 주고

받기 협상이 됐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회는 시급히 사회적인 합의를 모아서 입법화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을 그랜드 디자인해야 하는 현안들이 있을 거예요. 노동시장을 그랜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복지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되 그랜드 디자인하는 부분들은 사회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그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최저임금 문제에서 제가 안타까운 건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서의 아쉬움을 넘어서 정부가 노동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들 노동존중을 얘기하지만 노동존중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 내에 아무도 없다는 건 정확하면서도 아픈 지적이에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취지, 임금체계가 어떻게 왜곡됐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정확히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거간꾼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이런 식으로 가면 임금격차도 문제지만, 왜곡된 임금체계를 오히려 더 온존시키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금격차를 완화한다는 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인 거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노동시



강진구 경향신문 탐사보도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국회 입법권 존중하되  
그랜드 디자인은  
사회적 대화로 논의해야

장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됐죠.

**박명준**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16.4%라는 역사적인 상승을 결정했고 이걸 계속 가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실의 여러 가지 압박기제도 풀어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두니 나오는 건 없고 노동계도 전략적으로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국회에서 손을 보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좀 더 노력할 여지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튀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버렸던 거죠.

**노광표** 왜 최저임금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가 하면, 핵심은 예측가능성이 깨졌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깨져서 복리후생까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2,500만 원이라는 이상한 캡을 만들어서 설명하는데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도 잘 안 되는 상황이죠. 정책의 일관성이 있으려면 영세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니까 최소한 5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법엔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최저임금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알지만, 최저임금을 올려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산별노조도 안 되어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다는 현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촛불정부라고 스스로 자임하는데, 촛불정부라면 정치적인 민주화뿐만 아니라 서민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경제적민주화라는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안 잡혀요. 이번에 최저임금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반영한 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들어올까요? 사회적 대화가 안 되도 좋으니까 정부가 할 일은 하고, 정부가 혼자 못하는 것은 노동계와 재계와 국민들한테 던져놓고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공간에 충실히 하겠다, 과정 중에 빠뜨리는 것도 있고 욱먹을 것



도 있겠지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놓지 않으면 들어올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 사회적 위기가 오고 있다

**박명준** 결국 사회적 대화가 잘되려면 경제민주화까지 포함한 정부정책의 정확한 메시지나 비전, 이런 것들이 먼저 깔려야 하는데 여전히 미흡하고 안개 속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승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노조 측에서도 노동존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해요. 노조가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 대다수의 노동자와 국민들을 설득할 비전이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석호** 최근 그 고민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단계예요. 노동이 거시적으로는 상당히 큰 요구를 가지고 있었고, 미시적으로는 자기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만, 중간이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 그 간극을 메우고 있는 중이죠. 이제야 조금씩 그 간극을 메우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여기저기서 고민 하는 것 같아요.

**강진구** 노동계에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우리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강화하는 기득권 집단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여당이 최저임금을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갔던 것은 그런 사회적인 통념들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설득력 있는 집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결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지를 강화하라고 주장한다면 최소한 고용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더 올린다든지, 증세에 찬성한다든지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되려고 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위해 뭘 내놔야 하는지, 본인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에 대한 존중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박명준** 이 부분은 한석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동의 전략부재와 자신감 부재, 노동의 주체의 한계도 같이 담겨 있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보겠다고 한 거였는데, 이번 판을 보면서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사회적 대화를 디자인해나갈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의 디자인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주체들의 한계와 불신과 오판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주 더 근본적으로 철학의 빈곤이나 구조적인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판을 다시 디자인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노광표** 지난 30년 동안 굳은 관습을 깨 나가는 과정인데 절대로 쉽지 않죠. 30년 동안 자본은 정부 뒤에 숨어 있었고,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 갇혀 있는 구조잖아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대화를 노동유연화나 경쟁력 효율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관

리하고 통제해왔던 역사가 있는 거죠.

사회적 대화는 제 경험에 따르면 위기상황이 아니면 별로 잘 작동하지 않는 기제입니다. 국가적이든 아니면 개별 사업장이든 업종이든 위기상황이 왔을 때 기존의 관성을 버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노사정 주체들이 위기에 대한 자기 인식과 조직적 공유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만 있다는 거죠. 조선업 종이나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기존의 관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내 틀까지 바꾸라고 요구하는가 하는 간극에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사회적 위기가 오고 있는 징표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노년층은 사회 안전망이 없어서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죠.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미래 산업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총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공유와 국민적인 대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부보다 자본이 먼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개별이익이 아니라 총자본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타협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재벌개혁에 대해서 양보니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3세, 4세 세습하는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노동이사제를 이야기하면 ‘빨갱이 나라를 만들려 한다고 반응하는 구조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안 되겠죠. 자본이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려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명준 수석전문위원

사회적 대화 잘되려면  
경제민주화를 포함해  
정부의 비전이 전제돼야 하는데  
미흡하고 정확하지 않다



정부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갖고 있고, 노동에 대한 양보나 타협지점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수준 말고는 대통령도 5년 동안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 솔직한 대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불안한 거죠. 정부는 철학이 없어진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데보다 연공급이 많은 공공 부분에 대해서 손대는 것이나 최저임금 보완이 일단 이루어지면서, 내부의 토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양대 노총이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 대화를 해서 뭘 타협하고 뭘 얻겠다는 것이 조직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뭘 되겠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봐요. 노사정 각 주체가 안 바뀔 때는 시민의 압력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계에는 '당신들이 원하는 사회는 뭐냐'라는 압력을 가해야 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걸 요구해야 합니다.

**한석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문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노동계나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보고 나니,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잡아가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대화가 파행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노사정에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굴러가는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날로 끝장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수습의 시간, 최저임금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박명준** 수습할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한석호 전 위원장님이 전략적 인내 등 여러 가지 조치들도 말씀하셨는데, 수습의 시간들을 각자가 어떻게 임해야 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강진구** 최저임금 문제가 현상적이든 본질적이든 여기서 비롯된 것이고, 결자해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이 내일 만료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하자면, 재논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원식 의원뿐만 아니라, 이인영 의원도 임금체계 문제를 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 했었어야 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하는데, 바른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문제를 잘못 풀었던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주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은 당연히 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이 심각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담아서 풀어야 합니다.

국회라는 논의 구조가 왜곡이 발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 양 주체가 테이블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잖아요. 동등한 발언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을 노동계에 줄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위원장님이 나서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번 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은 정부가 잘못했으니, 위원장님이 나서서 유감 표명도 하면서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동등하고 공정한 테이블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윤** 저는 사회적 위기를 모두가 느끼는 심각한 순간이 오더라도 재계에는 희망을 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구조 속에서 재계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시민사회가 압박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길이 멀게 느껴지고 그 사이에 재계가 더 커져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인내하는 데 희망을 가져보는 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기구에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데, 만약 노측의 전략이 부재하다면 누군가가 아젠다 세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통상임금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까지 가지고 오는 등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제나 EITC도 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식으로 노동존중이 될 수 있는지, 정부가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그릴 수 있겠죠. 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판을 그려주고 다시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석호** 그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까지 불똥이 튀어 한 패거리 아니냐고 비판받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예전 같았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야기할 때 상여금조차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국회로 갔던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다만 통상임금이나 임금체제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노동이 얻어오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했죠. 여전히 전략 없는 결과를 내보이기는 했지만, 민주노총 안팎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려는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아쉽습니다. 물론 시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진지하게 한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국회로 넘어가서 처리되지 않고 좀 더 맡겨 났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봅니다.



한석호 전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예전과는 달리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고민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노광표** 최저임금 문제는 준비 없이 슬로건을 정책화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가 만 원을 주장하는 것과 이것을 정책으로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구조조정도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쪽으로는 의제를 빼앗겨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플러스알파가 된 사례는 나오지도 않고, 주로 일자리가 어떻게 됐다는 괴담만 떠돌았죠. 소위 최저임금 1만 원을 구호로 내걸고 정책화하면서 정부와 노동계는 무엇을 한 것인지 공동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게임입니다. 7월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KDI에서 발표한 것으로 도배되고 있잖아요. 노동계는 16.4%를 넘어 20% 정도가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분위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노사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누구의 책임으로만 하기는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는 과정이다, 그런 부분 속에서 노사정이 좀 더 책임 있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입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는 못하지만 예상되는 역기능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완대책을 책임 있게 펴겠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약용하지 않고 보완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를 최저임금만으로 풀지 않겠다고 선언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는 최저임금을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애환을 해결할 다른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것부터 하겠다, 그런 면에서 노동계, 재계, 시민사회를 정부가 책임 있게 만나면서 낮은 걸음으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런 기획을 받을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 컨트롤타워 역할 재점검 필요

**이승윤** 판을 세팅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정부 아닐까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보면, 정부가 획기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화의 판이 재개되기 어렵고, 이 판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노조도 훨씬 더 크게 최저임금과 함께 패키지로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와야 할 거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는 하지만,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겠죠.

**강진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실을 비교해 봤더니, 경향신문과 한겨레 외에는 전부 최저임금 후폭풍,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일보와 국민일보가 약간 톤 다운해서 후유증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도였죠.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국회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담론을 각 주체들이 동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회의나 의미 있는 회의를 정례적으로 생중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노동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노동에 대한 중요성, 노동이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노동에 대한 담론의 수준이 노동을 하고 임금을 얼마나 받는가에 갇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담론을 전반

적으로 높이는 차원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정한 논의구조를 보장하면서 그런 논의를 외화하는 데 지상과 중계를 정례화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토론의 장에 나와서 맞장토론을 할 때 재계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석호** 대통령의 프레임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존중사회 프레임으로는 계속 이 상태를 못 벗어날 겁니다. 양극화 해소나 '생계안정 사회' 같은 프레임으로 확장하는 거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루는 문제도 노동문제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청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대표성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존중으로 다 만족되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재벌개혁이든, 복지문제든, 증세문제든 이제는 이런 의제들을 꺼낼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이런 게 나와야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뭔가 정부가 진짜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사회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이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것인가 하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준** 노동존중의 프레임을 더 확장시켜서 본질적인 개혁 의제인 재벌, 복지, 조세문제 등을 꺼내고 가자는 말씀입니다.

**노광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하게 되면 승리 도취가 아니더라도 긴장감을 가지기 힘들어집니다. 정책 대결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진보든 보수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가지고 나오지만, 너무 완승 구도로 가니까 정책도 안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회의적입니다. 총괄적인 사회정책의 틀을 잡으면서 복지와

노동과 교육을 연결시켜 나가는 비상시국이라는 느낌을 가져야 하는데, 비상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이렇게 난리가 났으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관계기관대책회의라도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컨트롤타워 문제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재점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뭔가 하려는 것이 시스템에 맞게 보여야 하고, 그러면서 정책 비전도 나와야 합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자기가 소신이 있어야 정책적으로 승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석호** 저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가 성공할 거냐 말 거냐를 가르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과도기를 겪어왔는데, 민주노총을 분석할 때 너무 쉽게 봐서도 안 되지만, 너무 어렵게, 안 된다고 보는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에는 지난 30년간 쭉 깔려 왔던 것이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동운동이 출발을 한 것이고요. 여전히 체제전복,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관성과 사고방식들이 깔려 있고 DNA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서는 비타협적이거나 ‘기승전투쟁’, ‘기승전쟁취’,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에서도 우리 것을 지켜야 해, 저렇게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모색하지 못했던 것이죠.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하는 게 그 지점을 말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욕을 먹으니까 나 안 해 하면서 뒤로 빠져서는, 내 손에는 피 안 묻었으니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에는 안 차지만, 30년 전과 비교하면 환골탈태라고 할 만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지만 공공운수노조나 사무금융노조에서 사회연대기금도 시도하고 있고, 이번에 금속노조에서는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확 깨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바

꿔보려고 하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흐를 것인지, 논의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준** 노동계 내부적으로 분명 변화하는 기류가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전통적인 방식의 DNA가 표출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사회적 대화가 여전히 쉽지 않고 가시밭길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필요성이 있고 유일한 장으로서의 기능을 잘 해주길 바라는 바람도 크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금과옥조로 받아 들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쓴 소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급대담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